월요광장

기억의 공동체를 위하여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이제, 4월에 듣는 "잊지 않을게, 미안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이 되었다. 누가 누구를 잊지 않겠다는 것인지, 왜 미안한 것인지 어떤 설명도 없지만 그 뜻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국의 어느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에 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4월을 두고 한 말이지 싶다. 이 시인이 쓴 '잔인한 달'이라는 말은 역설적 표현에 불과하지만, 그 역설이 곧 현실인 곳에서 '잊지 않을게'라는 약속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기억은 인간의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일이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인상과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상기하는 것이다. 인상을 저장한다는 것은 사건만이 아니라, 당시의 고통과 감정도 함께 저장한다는 뜻이며, 과거의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되살리는 것이다. 상기 능력은 보통은 아주 쓸모가 많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일에 대한 상기는 이미 한 번 겪은 불행과 고통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기억' 속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더구나 개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적인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면 '현재'의 삶은 뿌리째 흔들린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운 좋게 피한 사람들에게는 타인들의 기억으로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의 기억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면서, '그 사람들'과 분리되고자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잊지 않을게'라는 말을 할 줄 안다. 이때의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직접 겪지 않았어도 '아로새기고', '간직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의 기억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타인의 경험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성'과 '동물성'은 동의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은 공유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개인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사회적인 지평 위에서 '소통적인 기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집단적 기억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고통이 집단의 고통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 의미를 지켜 낼 수 있다. 그래서 집단 기억이란 단순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단 기억은 '나의 기억'에서 '우리의 기억'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집단 기억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가 전쟁의 재앙을 겪고 나서부터다. 전쟁은 세대별로, 인종별로, 지역별로 저마다 다른 기억과 상흔을 남겼고, 개인들은 제각기 고통과 절망의 기억 속에 갇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기억의 공유를, 곧 기억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단 기억은 '은폐된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기억의 공동체는 개인의 기억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대신에, 개인들의 기억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집단 기억의 형성 과정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 기억은 자칫하면 권력과 통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집단 기억의 관리와 통제다. 그래서 권력자는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을 조작하거나 결정하고, 쉽게 '좋은 기억'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왜냐하면 권력자는 자신의 사적 기억을 공동체 집단 기억으로 착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는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매일 같이 고통은 말을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동과 서를 나누고, 남과 북을 가르던 기억에서 벗어나고, '노란 리본'에 담긴 아픔과 고통을 담아내는 기억의 공동체를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시작하는 작은 기억의 공동체는 가능하다. 기억을 공유한다고 해서 고통의 기억이 지워질 수 있겠는가? 다만 삶을 파괴하는 기억의 무게를 나누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며, 정지된 시간을 흐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나누는 첫걸음은 더 이상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눈감지 않는 것이다. 고통에 있어서 중립이란 없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할 시간이다. 이것이 4월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아니겠는가!

법조칼럼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

조 영 희
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성판매자가 제정신청해 진행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의 자유화·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착취적 성격을 가져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 뜨린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구매자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가 처벌된다는 사실을 안 후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성구매자를 처벌하더라도 성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구매자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성판매자가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성판매 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 등 성매매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성매매처벌법은 위계나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사람, 업무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 경우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선불금 등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받아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성매매피해자'라는 개념을 폭넓게 인정,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판매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성판매자가 성매매에서 이탈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성의 상품화는 성판매자 자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여 신체의 일부 및 장기를 매매하거나 절도를 범하는 것이 합법화될 수는 없다는 점,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조차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만을 이유로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기 고

빛고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

조 용 철
전 호남대 신방과 교수

4·13 총선 결과 빛고을 광주는 국민의당(녹색) 일색이 되었다. 창당 두 달 만에 기적을 이룬 것이다. 광주발 녹색 물결은 전국에 미쳐 그 파장은 정당 득표율(26.7%)에서 더불어민주당(25.5%)을 앞서는 괴력을 보여주었다. 제한된 지역에만 후보를 내세우고도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 다음으로 많은 지지표를 얻었다. 이른바 교차투표(cross voting)라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만든 새바람이었다. 이 같은 선거문화는 결과적으로 자유, 민주, 정의를 갈망하는 빛고을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하여 일어선 국민의 당에 대한 전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동기감응(同氣感應)함으로써 '민심은 곧 천심'임을 확인해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천심(天心)은 늘 잠재적이고 말세론적이어서 직관력이 부족하고 현상유지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질 않는다. 대중영합적이고 개인의 영달만을 좇는 사람들의 귀에는 더더욱 하늘의 소리(天聲·곧 민중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뽑힌 빛고을 8선량(選良·국회의원)들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의지로 환골탈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광주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를 감히 제언한다. 그래야만 4·13 총선에서 보여준 전국민의 지지에 대한 진심어린 보답이 될 것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이라면 내 한 몸 털 한 올 남기지 않고 다 뽑겠다'는 각오로 새정치, 새질서를 향한 새물결(new wave)의 전위(vanguard)가 되려 한다면 그 일은 당연지사에 속할 것이라 본다.

그 선언문의 첫째는 불체포 특권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동안 갑질만 골라 했던 국회가 진정 어린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가장 먼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갑질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갑질은 정의에 반하는 부정한 행동이요 도덕적인 타락행위이다.

둘째는 세비를 반으로 줄여 혈세를 아끼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국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원칙을 지키라고 한다. 그러고도 국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는 세계적, 보편적 원리인 '과반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이 법이 있는 한 어떤 여당도 18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된 것도 바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다. 끝으로 안보 없이 국가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이라는 공포의 무기를 머리에 인 채 살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친북과 종북 세력에 대해 누구하나 결연하게 나서는 당이 없다. 이러고도 선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국민의 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4·13 총선의 교훈은 불통과 오만의 결과를 잔인하리만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본다. 한사코 백성을 가르치려드는 통치, 거대 몸짓에 머리가 부족한 여당,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발목만 잡는 생각이 정지된 야당에 대한 '불칼'이었다.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눕는 것도 풀이지만, 바람이 자고 나면 가장 빨리 일어서는 것도 풀이다. 권력 앞에 백성은 나약한 풀과 같지만 일어설 때는 가장 먼저 성난 모습으로 일어선다는 불변의 진리를 이번 4·13 총선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의 당은 이 같은 명약관화한 사실을 귀감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국민의 당'으로 진화해야만 한다. 그 길만이 민주, 자유, 정의를 갈구하는 빛고을 사람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요 나아가 전국민의 희망에 불씨를 지피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 당은 특정인에 이끌려가는 반짝 정당이 되지 말기를, 잘 보이지도 않고 명쾌하게 들리지도 않은 민심을 두 눈 부릅뜨고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며, 귀에 공이가 박히도록 박문강기(博聞強記)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질풍노도(Strum und Drang)가 바다 속을 휘저어 풍어(豊漁)를 불러오듯이, 빛고을 '8선량 선언문'은 광주발 질풍노도가 되어 이 나라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광주발 화사한 봄빛이 크고 넓고 하나 되는 대한(大韓)의 빛이 되어 이 나라 중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주길 간구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절묘한 국민의 표심 '협력하는 국회 만들라'

이번 총선은 정말 무섭고도 절묘했다. 여당과 야당을 골고루 심판함으로써 그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3당 체제가 됐다. '신의 한 수'라 할 만하다.

따라서 이제 어느 당도 법안을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쟁점 법안은 더더욱 그렇다. 180석 이상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180석을 넘지는 못한다.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하겠다.

이견이 적은 법안이나 안건은 국민의당 협조를 얻는 쪽이 처리할 수 있다. 야3당이 합심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다. 여당도 국민의당만 협력하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운데 국민의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당의 공조제안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지난해 10월 당시 정의당,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과 함께 연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당이 원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더민주도 사안에 따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와 같은 정부 여당의 독주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실현되면서 야권의 정권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당장, 호남 민심은 두 야당에 협력과 경쟁을 통한 정권 창출의 길을 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로서는 과거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호남에 대한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의당 또한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한 정치적 능력을 보임으로써 정권 창출의 비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문재인의 변심'

4·13 총선에서 '텃밭'이었던 호남 28석 가운데 25석을 국민의당에 내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아직도 참패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하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고민이 커 보이는데 그는 총선 전 '조건부 대선 포기와 정계 은퇴'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총선 직전 광주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치에서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약속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얼버무린 것이다.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비록 호남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의 전체적인 총선 승리 분위기에 편승해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영남에서 약진하고 수도권에서 압승해 123석으로 1당에 올라선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공로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선거 막판 그의 정계 은퇴 발언을 보며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국 그는 총선 직후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당시 '광주 약속'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결단이었다기보단 급박한 상황을 잠깐 피해 보려는 선거용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미덕은 역시 신뢰라는 말이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패하고도 책임은커녕 자숙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호남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다. 이번에도 그가 약속한 대로 분명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호남민을 가볍게 여김과 동시에 야권 대선 주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無 等 鼓

철쭉

엊그제만 해도 벚꽃 천지였던 것 같은데, 주말에 내린 봄비로 얼마 남지 않은 꽃잎이 모두 내려앉았다. 하지만 벚꽃의 낙화를 느낄 새도 없이 철쭉이 만개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 지역 지자체들은 앞다퉈 철쭉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가학산 자연휴양림에서 철쭉 축제를 열며, 광양군도 30일부터 이틀간 백운산 국사봉 철쭉 축제를 개최한다. 화순군은 이달 말 철쭉 1만 그루가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 제1회 화순 동우리 봄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도 5월 중에 열린다.

철쭉이야 4~5월이면 어디에서든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달래와 철쭉·영산홍의 약간은 다른 모양새를 보며 한 번쯤은 궁금해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모두 같은 진달래과지만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화 시기가 가장 빠른 진달래와 이어 피는 철쭉을 구별하기 쉽지 않고, 철쭉과 가장 나중에 피는 영산홍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

철쭉은 꽃과 잎이 무성한 게 특징이지만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난다. 즉 꽃받침이 없이 꽃만 피어 있다면 진달래다. 진달래는 예전에는 구황식물로 화전이나 술을 담가 먹었으며, 아이들은 산에서 꽃을 따먹기도 했다. 그러나 철쭉은 독성이 있어 식용으로 맞지 않다. 이 때문에 진달래는 참꽃, 철쭉은 개꽃이라고도 불린다.

철쭉과 영산홍은 꽃의 크기와 수술 개수로 구별이 가능하다. 영산홍 꽃은 대개 철쭉보다 크기가 작으며, 수술 개수도 5개로 철쭉(10개)보다 적다. 특히 한 가지 끝에 영산홍은 한 송이만을 피우지만 철쭉은 서너 송이가 맺힌다.

이 세 꽃 가운데 조상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한 것은 영산홍(映山紅)이었던 것 같다. 영산홍은 조선 임금 연산군이 좋아해 1만 그루를 궁궐에 심었다고 해서, 임금 이름을 따 '연산홍'이라고도 불린다. 인조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등극한 인조는 여자를 멀리하고, 정사를 올곧게 돌보겠다는 의지로 연산홍을 모두 제거했다고 한다.

나른해지기 쉬운 봄날이다. 지방 곳곳에서 열리는 철쭉 축제에 들러 봄 기운을 만끽해 보면 어떨까?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